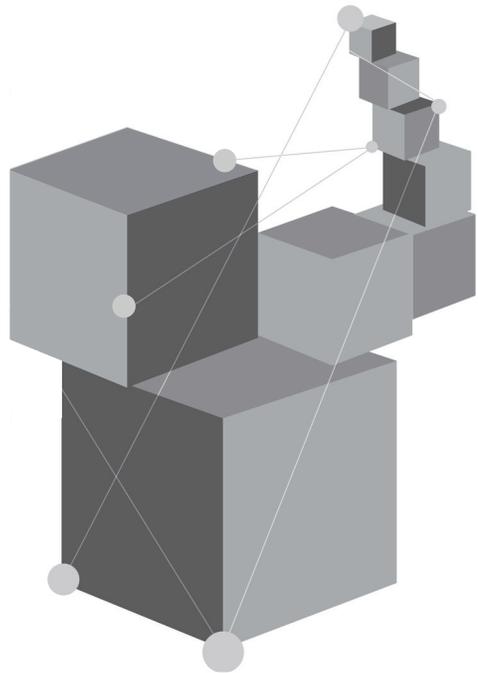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1.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 2012-106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인일보 발행인 송 광 석
2.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3.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울
4. 每日新聞 발행인 이 창 영
5. 경상일보 발행인 배 명 철
6.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문〉

경인일보 2012년 4월 4일자 7면 「더 높아진 은행 대출문턱 서민들 ‘돈 빌릴 곳이 없다’」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4월 4일자 16면 「“한국 휘발유 가격 OECD 평균 2.4배”」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4월 5일자 6면 「휴대폰 자급제 한 달 앞으로 ... /노예약정 사라지고 요금제도 마음대로 선택」 제하의 기사, 每日新聞 4월 5일자 12면 「기관별 연금저축 정보 한자리에 모아 모아」 제하의 기사, 경상일보 4월 6일자 9면 「中企 대상 제3주식시장 코넥스(KONEX) 연내 문 연다」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4월 6일자 13면 「사채 불법추심 등 민생금융 범죄 꼼짝마!」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위 6개 신문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인일보)= 『올해 2분기 대출수요가 3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으나 은행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3월 12~23일까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은행을 조사해 3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조사) 결과’를 보면 대출

수요지수는 23으로 2008년 4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출수요지수는 0을 기준으로 -100~100까지 분포한다. 지수가 높을수록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조사결과 중소기업과 가계의 대출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은행들은 대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한은은 “은행들이 대내외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신용위험 상승 우려가 커지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 역시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대책, 가계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더욱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기자』

(부산일보)= 『(전략)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인의 구매력평가지수(PPP)를 고려한 무연 휘발유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4배 수준이라는 주장하자, 기획재정부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정부가 한국 유류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논리를 내세워 다수 국민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맞서고 있는데 이는 기만 행위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3월15일 ‘OECD 국가와 우리나라 휘발유·경유 가격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리터당 2천16원인 고급(무연) 휘발유 가격이 OECD 기준으로 20위(조사대상 22개국)이고, 가격 대비 세금 비중 순위도 20위라고 발표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최근 발표한 만큼 서민 고통의 주범 중 하나인 유가와 유류세도 PPP로 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중략)

기재부는 납세자연맹이 참고한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는 없는 유로존 회원국들의 PPP 환율 기준 휘발유 가격을 포함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OECD 평균의 1.44배 수준이고, 지난해에는 OECD 평균의 1.42배로 낮아졌다고 해명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작년에 중동지역 정정불안 탓에 올랐음에도 상승률은 OECD 평균치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권○○ 기자』

(중부일보)= 『이동통신사에 상관없이 단말기를 살 수 있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제(휴대전화 자급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통사 중심의 폐쇄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휴대전화 자급제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단말기를 살 수 있는 곳이 다양해져 마트는 물론 해외에서 사온 휴대전화도 주파수 대역만 맞으면 유심(USIM; 범용가입자인증모듈)칩을 끼워 사용할 수 있다.(중략)

방통위는 각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방식에 차별없이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내놓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휴대전화 자급제도의 취지대로 단말기 구분 없이 고객이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기자』

(毎日新聞)=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등 주요정보를 취급 기관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민이 안정적으로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연금저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은퇴자산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어 연금저축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런 상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지 않자 당국이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중략)

공시엔 각 상품의 실수익률, 수수료 등을 담는다. 각 금융회사의 계약유지율과 이전율 등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한다. 연금저축을 파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가입·계약 이전 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해 불완전판매 소지를 줄일 방침이다. 김○○ 기자』

(경상일보)=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에 상장된 기업 이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3의 주식시장이 연내 개설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진입과 퇴출요건, 공시의무 등이 대폭 완화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가칭)를 설립, 연내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넥스에 진입 가능한 중소기업은 감사의견이 적정한 기업 중 코스닥시장 진입요건의 10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의 자기자본, 매출 또는 당기순이익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중략)

금융위는 코넥스 상장 이후 1년 정도 기간이 지난 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시장 상장시 상장적격성 심사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김○○ 기자』

(영남일보)= 『고금리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 등 민생금융범죄를 근절하려는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이 전개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대검찰청에 총리실, 행정안전부, 금융위,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설치해 민생금융범죄 단속을 총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생 금융범죄 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금감원 등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표 신고전화도 개설할 예정이다.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대부업체엔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소금융, 전환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불법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기로 했다.(후략) 홍○○ 기자』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6개 신문은 연합뉴스가 각각 제공한 기사를 부분적으로 침삭하거나 일부 문단을 생략한 채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만 보도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항(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06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남매일 발행인 최 용 호
2. 서울일보 발행인 이 근 학

〈주 문〉

경남매일 2012년 4월 3일자 9면 「“선거 승리는 새 시대 출발점”」 제하의 기사, 서울일보 4월 4일자 1면 「“MB·박근혜 증인으로” 승부수 던진 민주통합」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남매일과 서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남매일)= 『미안마 민주화 운동지도자 이웅산 수치 여사는 2일 “야당의 보궐선거 승리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안마는 지난 1일 국회의원의 내각 진출로 공석이 된 45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치렀고, 선거에 출마한 수치 여사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치 여사는 이날 옛 수도 양곤에 있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당사에서 연설을 통해 보궐선거 승리를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NLD는 수치 여사가 당 총재로 있다.(후략)』

(서울일보)= 『민주통합당이 3일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4·11 총선 직후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인 박선숙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에서 청문회를 즉각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 청문회에는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후략)』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매일은 연합뉴스와 문화일보가 제공한 기사를 짜깁기해 전재하였고, 서울일보는 뉴시스가 제공한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도 각각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항(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07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일보 발행인 김 병 수

〈주문〉

세계일보 2012년 6월 5일자 13면 「“8개 핵국가, 핵탄두 1만9000개 보유”/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 보고/”작동 가능 핵무기 4400기 北 보유규모 정보 없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미국과 중국 등 8개 핵보유 국가가 올해 초 기준으로 핵탄두 1만9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미국이 한 해 지출하는 군비가 7110억달러(약 840조원)로, 세계 2위 군비지출 국가인 중국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4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군비삭감으로 2011년 군비지출이 2010년에 비해 0.3%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핵보유국은 핵 전력의 현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8개 핵보유국은

올해 초 기준으로 배치, 저장, 해체 예정을 망라해 핵탄두 1만9000개를 갖고 있다. 이들 국가는 또 작동 가능한 핵무기 4400기를 보유 중이고, 이 중 2000여기는 언제든 작전에 투입될 태세를 갖추고 있다.

SIPRI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핵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작동 가능한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공적인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8개까지 제조 가능한 플루토늄 30kg을 분리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전문가패널이 2011년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나 핵무기용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는 연합뉴스가 6월 4일 11:19에 (스톡홀름 dpa= 연합뉴스) 라는 크레디트를 달아 송고한 「“8개 핵국가, 핵탄두 1만9천개 보유”(종합)」 제목의 기사의 13개 단락 중 8개 단락을 일부 사소한 표현만 바꿔 전제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는데,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3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奎光日報 발행인 박 양 주
2. 호남매일 발행인 김 준 수

〈주문〉

奎光日報 2012년 8월 3일자 8면 「정진선 12년 만에 에페 동메달」 제목의

기사, 호남매일 8월 8일자 2면 「새누리당 절체절명 위기」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全光日報, 호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全光日報)= 『정진선(28·화성시청)이 2012런던올림픽 펜싱 남자 에페 개인전 동메달을 따냈다.

정진선은 2일(한국시간) 런던의 엑셀 사우스 아레나1에서 열린 2012런던 올림픽 펜싱 남자 에페 개인전 동메달결정전에서 세스 켈시(31·미국)를 연장 접전 끝에 12-11로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준결승에서 바르토스 피아섹키(26·노르웨이)에게 져 동메달결정전으로 밀려난 정진선은 켈시에 짜릿한 1점차 승리를 거두면서 동메달을 품에 안았다.

정진선은 전날 남자 플뢰레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딴 최병철(31·화성시청)에 이어 이번 올림픽 한국 펜싱 두 번째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 남자 펜싱이 올림픽 에페에서 메달을 딴 것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이상기가 동메달을 딴 이후 12년만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8강 문턱을 넘지 못하고 5위에 그쳤던 정진선은 이번 올림픽 동메달로 아쉬움을 덜어냈다.(후략)』

(호남매일)= 『새누리당 ‘공천헌금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공천헌금이 오갔을 정황이 하나둘씩 새롭게 제기되면서 새누리당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이 두 사람 제명이라는 강경책을 내놓긴 했지만 당의 쇠신 이미지는 이미 타격을 받은 상태다.

두 사람에게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당은 다시 한번 크게 휘청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만의 하나 공천위원으로 활동했던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현 전 의원의 연루가 확인될 경우 ‘불법·불공천’의 오명이 덧씌워지면서 당 자체는 물론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가도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현영희 의원의 과거 수행비서였던 정모씨가 검찰에서 ‘중간전달책’ 조기문씨를 통해 현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7일 현재 현 전 의원은 조씨를 접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상태다.(후략)』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奎光日報는 뉴시스가, 호남매일은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 내용을 각각 그대로 전재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53 신문윤리강령 위반

光州日報 발행인 김 여 송

〈주문〉

光州日報 2012년 9월 13일자 5면 「대선 앞두고 술렁이는 PK민심」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光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말대선(12월 19일)선을 90여일 앞두고 부산·경남(PK)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영·호남 지역주의 속에 수도권·충청권이 승패를 갈랐던 역대 대선과 달리 이번엔 PK 지역 표심에 의해 승패가 갈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간 PK는 새누리당 전통 강세 지역이었다. 하지만, 야권 유력 대권 주자들이 PK 출신이고 지난 4·11 총선에서 야권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일방적 강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4·11 총선 비례대표선거에선 새누리당이 51.3%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했고 진보 진영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지지율 합계는 40.2%였다.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야권의 PK 지지율 격차가 더 좁혀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대선 초반 PK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야권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10%p 안팎에 불과하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1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부산·울산·경남에서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각각 50.7%, 41.4%를 기록했다. 박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경선 후보의 양자대결은 48.3%, 38.8%로 나타났다.

같은 여론조사기관의 이 지역 조사인원이 160명에 불과, 전체 PK 여론을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때 안 원장이 박 후보를 앞선 적도 있다는 점에서 PK 민심의 유동성을 반영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영남권이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고한 지지를 보이는 TK(대구·경북)와 문재인 경선 후보와 안철수 원장의 고향인 부산을 중심으로 한 PK로 양분, 엇갈린 표심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부산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당시에는 영·호남 지역구도 속의 대선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신지역주의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제기된 PK 소외론과도 무관치 않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무산되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점, 나아가 정부 인사에서 TK 출신이 중용되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이 겹

치면서 여권 전체에 대한 반감 기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PK 정치를 상징해온 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 후보가 껄끄러운 관계라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다만, PK에서 박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새누리당의 PK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경남 함안 출신의 안대회 전 대법관을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처럼 중앙선대위에 김무성 전 의원 등 PK 인사를 대거 중용하고 신공항 추진, 해양수산부 부활 등의 정책을 제시하며 PK의 이탈을 막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대선을 앞두고 부산·경남지역의 민심 동향과 전망을 다룬 기획기사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9월 12일 10:52 송고한 「〈대선 앞두고 술렁이는 PK 민심.. 輿대책 돌입〉」 제하의 기사 21개 단락 중 8개 단락을 제외한 13개 단락을 순서도 바꾸지 않은 채 옮기고 리드 부분과 기사 중의 일부 문구, 표현만 바꾼 것인데도 연합뉴스 기사 전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가 작성한 것처럼 기사 말미에 자사 기자의 이름을 명시하였다.

통신 기사를 이처럼 무단 전재해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표절행위다. 이러한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00 신문윤리강령 위반

奎光日報 발행인 박 양 주

〈주문〉

奎光日報 2012년 11월 2일자 2면 「국회 본회의 대선 이슈 놓고 설전」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奎光日報는 자사 지면에 이 결정 주문 및 이유 부분의 요지를 게재하여야 한다.

〈이유〉

1. 奎光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 발언을 통해 야권 단일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투표시간 연장, 여성대통령론 등 12월 대선 주요 이슈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정치 선진국에서 단일화라는 말을 들어 본 적 있느냐”며 “선거때만 되면 나타나는 야합놀음에 국민들도 이제 피곤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후보는 지금 3자 여론조사에서 꼴찌인 3등”이라며 “그런 데도 소속 의원들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은 무자격 후보들을 야합시켜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공작게임에 흠뻑 빠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은 박근혜 후보 측의 ‘여성대통령론’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가 여성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며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여성을 기존 통념에 얽매이게 하는 구태적이고 엄연한 성차별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정치쇄신을 얘기하면서 우선 혈뜯고 보자는 구태정치의 모습은 무엇이냐”며 “신경질적 트집잡기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박근혜 그×’ 표현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종걸

의원 징계안이 이날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처리되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저급한 막말을 옹호하는 정당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후략) 신○○ 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奎光日報는 뉴시스가 11월 1일 16:13 제공한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奎光日報는 신문윤리위원회 제856차, 제857차, 제858차 회의에서 같은 위반 행위로 3회 연속 경고를 받았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32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2년 12월 7일자 9면 「원산항서 금수산궁전까지 2800km … 전봇대 뽑고, 레일 깔고 … /北 ‘김정일 요트’ 수송작전 요지경」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주기(17일) 행사가 요란하게 전개되고 있다. 김정일요트 수송작전, 시신의 미라 작업, 금수산태양궁전 안팎의

초호화 치장작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국제사회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발로 규정한 로켓발사는 1주기 행사의 하이라이트다. 7일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3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을 식량부족국가로 재지정했다.

최근 원산항에 있던 김정일의 호화요트는 바닷길과 육로 2800km에 이르는 수송작전을 통해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궁전까지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육로운송 도중 장애물이 되는 도로변의 전봇대까지 뽑혔고, 궁전 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한쪽 벽면까지 허물고 임시 레일이 깔렸다. 김 위원장이 생전 원산 별장 앞바다에서 선상파티나 낚시를 즐겼던 요트다.

요트는 해로로 동해→남해→서해 남포항까지 2778km, 육로로 남포~평양 고속도로~금수산궁전까지 44km의 대장정을 해야 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도 2009년 7월 이탈리아 유명 요트제작업체인 아지무트사에 250억 원 상당의 요트 2척을 주문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구매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시신은 미라로 만들기 위한 막바지 방부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미라 1구를 만드는 작업에는 100만 달러, 연간 관리비용으로 150만 달러가 들어간다. 이곳에 안치된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 처리와 보존, 관리를 위해 평양에는 수 명의 러시아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다.

금수산궁전 앞 광장은 콘크리트가 모두 걷어내지고 대형분수가 설치된 가운데, 잔디·튤립·장미 정원으로 꾸며지고 있다. 유럽산 화초와 잔디 종자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해외파견자들에게 전달됐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유럽식 공원으로 만들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궁전 내부 치장을 위해서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을 수입하고 수십만 달러를 들여 소파, 탁자는 물론 변기까지 구입했다.

특히 신비감을 조성하기 위해 특수 조명기기 수십 t도 사들이고 있다. 필요한 공사비용은 해외공관원, 파견근로자들에 달러 상납을 압박해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원산항에 있던 김정일의 호화 요트를 바닷길과 육로를 통해 평양 금수산궁전으로 옮겼다는 등 관련 움직임을 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과 함께 위 적시 기사로 상세히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그러나 취재원 등 기사의 출처는 전혀 밝히지 않은 채 기사 끝에 자사 기자의 이름을 명기했다.

연합뉴스는 위 기사가 보도된 12월 7일 오전 8시 30분에 문화일보가 게재한 사진과 더불어 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를 송고했다.

기사의 성격과 내용으로 미루어 오전 11시 무렵에 기사를 마감하는 석간인 문화일보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장문의 기사를 일부 문구만 고쳐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사가 직접 취재한 양 바이라인을 단 것은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4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江原日報 발행인 이 희 종
2. 광주매일신문 발행인 서 영 진
3. 全光日報 발행인 박 양 주
4. 호남매일 발행인 김 준 수

〈주 문〉

江原日報 2012년 11월 22일자 11면 「스키점프 평창올림픽서 메달 노린다」 제목의 기사, 광주매일신문 12월 4일자 14면 「“경기에 많이 뛸 수 있는 데 가

고 싶다”」 제목의 기사, 全光日報 12월 10일자 8면 「김연아, 20개월만의 북귀 전 ‘압도적」」 제목의 기사와 사진, 호남매일 12월 14일자 12면 「러시엔캐시, V 리그 4강 위협 ‘복병’ 등장」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江原日報, 광주매일신문, 全光日報, 호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江原日報)= 『대한스키협회는 스키점프 대표팀의 새 사령탑으로 스웨덴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의 볼프강 하트만(52·독일) 감독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하트만 신임 감독은 2006~2011년 스웨덴 대표팀을 이끌었고 올해 국제스키연맹(FIS) 여자 스키점프 월드컵 경기국장을 맡는 등 스키점프 종목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지도자라고 스키협회는 소개했다.

협회는 하트만 감독과 내달 1일부터 소치 동계올림픽의 폐막 후인 2014년 4월까지 계약했다.

외국인 지도자가 스키점프 대표팀을 맡은 것은 1995~2003년 한국 선수들을 지도하며 2003년 이탈리아 타르비시오 동계 유니버시아드 개인·단체 우승을 이끈 요헨 단네베르크(독일) 코치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하트만 감독은 최홍철, 최서우, 김현기, 강철구(이상 하이원), 박제언(한체대) 등 대표선수 5명을 지도한다.

하트만 감독과 선수들은 내달 유럽에서 열리는 스위스 엔겔베르그 월드컵, 폴란드 자코판 대륙컵 등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후략)』

(광주매일신문)= 『해외 진출을 타진하는 윤석영(22·전남 드래곤즈)은 “경기에 많이 뛸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영은 3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에서 열린 프로축구 시상식에 앞서 이적 추진의 경과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해 런던 올림픽에서 왼쪽 수비수로 맹활약해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클럽에서 러브콜을 보냈다는 소문도 돌았다.

윤석영은 아직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적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신경을 쓰지 않겠다”며 “정상적으로 경기하도록 몸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윤석영은 리그 후반에 발목을 다쳐 재활하고 있다.

그는 “(해외 구단에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오퍼가 온다면 이적을 본격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 구단은 계약 조건이 기대에 맞는 수준이라면 윤석영의 이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영은 유럽이 아닌 일본이나 국내 리그로 동지를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말은 못하겠다”고 답했다.』

(奎光日報)= 『‘피겨여왕’ 김연아(22·고려대)가 20개월만의 복귀전에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김연아는 8일(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의 아이스스포츠센터룸에서 열린 NRW 트로피 시니어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72.27점을 기록했다.

기술점수(TES) 37.42점, 예술점수(PCS) 34.85점을 받은 김연아는 예상대로 1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B급 대회이지만 김연아는 내년 벌어지는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 이번 대회에 나섰다.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어린 선수들과 경쟁한 김연아는 압도적인 차이로 1위로 올라섰다. 김연아와 쇼트프로그램 2위에 오른 제니아 마카로바(러시아·59.55점)의 차이는 12.72점에 달했다.

이번 대회에서 김연아의 순위는 큰 의미가 없지만 점수 자체도 나쁘지 않았다.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에서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얻어야 하는 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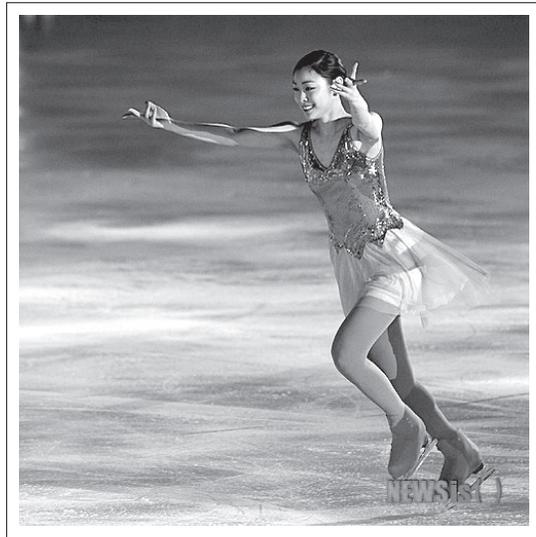
기술점수 28.00점을 훌쩍 뛰어넘으며 ‘여왕’의 위용을 뽐냈다.

이번에 김연아가 받은 점수는 2006년 시니어 무대 데뷔 후 국제대회에서 기록한 쇼트프로그램 점수 가운데 개인통산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또 전날 벌어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1위에 오른 아사다 마오(22·일본)가 기록한 66.96점보다 높은 점수다.

김연아는 풍부한 표정연기로 예술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따내는데 성공했다. 이날 김연아가 받은 예술점수는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기록한 것보다 높았다. 김연아의 밴쿠버동계올림픽 쇼트프로그램 예술점수는 33.80점이었다.

이날 김연아의 연기는 20개월이라는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날리는 동시에 ‘여왕의 귀환’을 알리는 것이었다.(후략)



〈江原日報 2012년 11월 22일자 11면〉

』

(호남매일)= 『남자 프로배구 러시엔캐시가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는 현대 캐피탈을 격침하며 올 시즌 프로배구의 판도를 좌우할 강력한 복병으로 떠올

랐다.

러시엔캐시는 12일 충남 아산시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캐피탈과의 2라운드 홈경기에서 플세트 접전 끝에 3-2(25-27 32-30 25-22 21-25 20-18)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개막 후 8연패 늪에 빠졌던 러시엔캐시는 8일 KEPCO전에서 첫 승리를 거두더니 이번에는 현대캐피탈까지 꺾는 이변을 연출하며 승점 6(2승8패)을 쌓았다.

3위 대한항공(승점 20)과는 승점 14점 차이지만 아직 시즌 초반이기에 3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행 티켓을 손에 쥐 수 있다는 희망을 살릴 수 있었다.

더군다나 현대캐피탈이 ‘무적함대’ 삼성화재에 시즌 첫 패배를 안기며 2라운드에서 과죽의 4연승을 질주하던 강팀이라는 점에서 러시엔캐시의 승리 기쁨은 두 배였다.

한 경기를 보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러시엔캐시가 이날 보여준 경기력은 ‘4강2약’ 구도로 진행되던 남자부 판세를 깨뜨리기에 충분해 보였다.(후략)』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江原日報는 연합뉴스가 11월 21일 15:15 송고한 「스키점프 대표팀 새 사령탑에 외국인 감독 선임」 제목의 기사를, 광주매일신문 기사는 연합뉴스가 12월 3일 15:24 송고한 「〈프로축구〉해외이적설 윤석영 “떨 수 있는 데 가고 싶다”」 제목의 기사의 대부분을, 奎光日報는 뉴시스가 12월 9일 09:39 송고한 「김연아, 20개월만의 복귀전서 압도적 1위…’여왕의 귀환’」 제목의 기사와 사진을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 호남매일은 연합뉴스가 12월 13일 10:53 송고한 「〈프로배구〉러시엔캐시, 4강 위협 ‘복병’ 등장」 제목의 기사를 일부 수정해 전재하고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2012-107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상 석
3.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朝鮮日報 2012년 5월 9일자 A4면 「이석기 “김정은 3대 세습, 북한의 눈으로 봐야”」 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5월 9일자 4면 「이석기 “정치적 논리에 사퇴할 수 없다”」 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5월 12일자 A5면 「정보당국 “하영옥씨 행적 살피고 있다”/민혁당재건 관련 최근 소재파악」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이유〉

1. 朝鮮日報, 한국일보,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朝鮮日報)=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으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비례대표 2번 이석기 당선자는 8일 언론 인터뷰에서 “엄청난 물리적 압박과 탄압이 있더라도, 정치적 논리에 의해 사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자신이 요구한 전당원 투표 외의 방식으로는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시민 대표가 이끄는) 참여당과의 통합을 제가 가장 먼저 제기하고

엄청난 논쟁을 했다”고 했다. 작년 하반기에 진행된 민노당·참여당·진보신당 합당 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참여당과의 합당을 반대했으나 민노당 당권파가 이를 관철시켰다. 이 당선자의 입을 통해 그의 당내 영향력을 짐작케 하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는 유시민 대표가 현 당원명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주민등록 번호가 있고 CMS(자동계좌이체)로 당비를 받는데 그런 유명당원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울산에서 수백명의 당비대납 당원이 확인됐었다.(후략)』

(한국일보)= 『통합진보당 당권파는 8일 비례대표 당선자 사퇴 여론에 대해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당권파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비례대표 2번 이석기 당선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논리에 의해 (당선자 직을) 사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자신이 제안한 당원 총투표에 따른 결론이 아닐 경우 사퇴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진상조사위원회가 제기한 부정경선 의혹들에 대해서도 일체 부인했다.

이 당선자는 자신에게 투표한 사람 중 60% 이상이 중복 IP를 사용했다는 의혹에는 “당원 구성 상 가족관계 입당이 많고, 노동조합과 농민회 등에서 사무실 투표가 많았다”면서 “저보다 중복 IP 사용량이 많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당권파인 유시민 공동대표에게 ‘정치적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에는 “소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적극 부인했다. 그는 “두 번 만났지만 많이 듣는 입장이었다”며 “현안을 정면 돌파하는 것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권파 핵심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의 실세라는 지적에는 “경기동부연합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실존하던 당시에도 이 단체에 소속돼 활동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후략)』

(東亞日報)= 『정보 당국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명당) 출신 인사들이 사실상 조직을 재건해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핵심인 경기동부연합을 장악한 것으로 보고 민혁명당 핵심 간부였던 하영옥 씨(사진)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그

의 소재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관계자는 11일 “하 씨가 민혁당 재건과 경기동부연합 장악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북한과 연계가 있는지 등 행적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하 씨는 11일자 언론 인터뷰에서 “정보 당국이 내 행방을 찾고 있다는 보도는 말도 안 된다”며 담당 형사가 자신에게 전화한 사실을 밝혔지만 당국이 옛 민혁당 세력의 재건 등에 하 씨가 연관됐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그의 행방을 파악한 것은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하 씨는 주체사상과 출신 인사들이 자신을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배후일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애들을 먹여 살리려고 학원 강사를 한 지 8년이 됐다”며 부인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 한국일보는 지난 5월 8일 저녁 인터넷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의 인터뷰 내용을 각각 5월 9일자 신문 위적시 기사에 인용해 보도하면서 출처를 한겨레가 아닌 ‘언론 인터뷰’로만 표기했다.

東亞日報도 경향신문이 5월 11일자 신문에 단독 보도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관련자인 하영옥씨 인터뷰 기사 내용 중 일부를 5월 12일자 신문 위 기사에 인용하면서 출처를 ‘언론 인터뷰’라고 썼다.

이 기사들은 인용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핵심적 내용의 대부분을 한겨레 또는 경향신문 기사로 채워 사실상 전재하다시피 했다.

이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제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1회성 실수가 아니라 잘못된 의식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표절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어야 할 신문이 오히려 타 신문의 보도 내용을 출처도 명시하지 않은 채 옮겨 적는 것은 신문의 사회적 공기로서의 기능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090 신문윤리강령 위반
전북중앙신문 발행인 이 창 승

〈주 문〉

전북중앙신문 2012년 5월 16일자 7면 「‘닥공2’ 복수칼날 무뎠다 … 가시와 戰 또 완패」 외 스포츠 기사 3건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전북중앙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북이 홈에서 가시와에 영패를 당하며 ACL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 현대는 1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2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H조 조별리그 최종전 가시와 레이솔과 경기서 0-2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전북은 3승3패 승점 9점으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승리를 챙긴 가시와는 3승1무2패 승점 10점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로써 전북은 경기 후 열리는 부리람 유나이티드(태국)과 광저우 에버그랜드(중국)의 경기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H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북과 3위인 가시와는 초반부터 맹렬한 기세로 맞대결을 펼쳤다. 최전방 공격수로 이동국을 앞세운 전북은 에닝요와 드로젯이 측면에서 활약하며 가시와 수비진을 괴롭혔다. 전북은 임유환의 부상으로 김정우와 김상식을 중앙 수비로 내세워 경기에 임했다.

전북과 1차전서 5-1의 대승을 거뒀던 가시와는 원정 불안감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다. 외국인 선수 바그너와 레안드로 도밍게스가 침착하게 공격을 펼

쳤다. 전북과 가시와는 득점을 뽑아내지 못한채 전반을 0-0으로 마쳤다.

후반 시작과 함께 갈 길 바쁜 가시와가 선제골을 터트렸다. 센터서클 중앙에서 올라온 볼이 전부 수비진이 제대로건어내지 못한 것을 오른쪽으로 연결되자 문전을 당해 달려들던 레안드로 도밍게스가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 가시와가 후반 4분 1-0으로 앞섰다.(후략)』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OSEN이 제공한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05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동 화

〈주문〉

서울신문 2012년 6월 8일자 9면 「“검찰서 들었다”/조현오 “노무현 차명계좌 비자금 수사팀 3명 전언”」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련 발언을 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발언의 출처는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라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의 발언은 사실 여부를 떠나 적잖은 과장이 예상된다.

조 전 청장은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명계좌 이야기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진행한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에게서 들었다.”면서 “모두 3명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으며 2명은 직접, 1명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해당 수사팀 관계자 직급과 이름까지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느냐, (차명계좌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 자신의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이 지목한 당시 검찰 관계자 A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전 청장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한 사실도 없는데 왜 수사팀 관계자를 빙자해 내 이름을 언급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조 전 청장이 언급한 수석역원의 차명계좌 발언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지난 6월 7일 밤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발언을 6월 8일자 신문 위 적시 기사에 인용해 보도하면서 출처를 jtbc가 아닌 『언론 인터뷰』로만 표기했다.

이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제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 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03 신문윤리강령 위반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영권

〈주문〉

파이낸셜뉴스 2012년 11월 7일자 9면 「‘文-安 단일화’ 초읽기 … 시너지 효과 내려면/‘감동 포인트·조직 융합’ 숙제 풀어야」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후보등록일 (25~26일) 이전에 단일화하기로 6일 전격 합의하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단일화가 어느 후보 쪽으로 이뤄지는지와 상관없이 이달 말부터는 대선 판도가 여야 1대 1 구도로 재편된다. 조직 면에서는 보수대연합과 범야권단일화 세력 간 대결로 명확히 갈리게 됐다. 다만 단일화 방법과 민주당 내 인적쇄신, 정치혁신 등에 대한 두 후보 간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에서 간극을 좁혀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 단일화 관건 ‘시너지효과’

단일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느냐다. 일단 박 후보가 3자 대결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야권 후보와 1대 1 대결 구도로 갈 경우 박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단일화 효과가 3자 대결보다는 높게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박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설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것이냐는 점에는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최근 한 언론이 지난 2~3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3자 대결에서는 박 후보 38.9%, 안 후보 27.8%, 문 후보 19.3%였지만 양자 대결에서는 결과

가 크게 달랐다.

박 후보와 문 후보의 대결은 47.3% 대 46.6%, 박 후보와 안 후보의 대결은 46.0% 대 50.4% 등으로 혼전을 보였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이 3~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다자 대결에서 박 후보 42.8%, 문 후보 27.2%, 안 후보 25.6%로 나타났지만 양자 대결에서는 박 후보와 문 후보 대결의 경우 46.2% 대 47.6%로, 박 후보와 안 후보의 대결은 46.3% 대 48.6%로 각각 조사됐다.

하지만 박 후보와 야권 후보의 1대 1 대결에서 ‘박빙’의 승부는 야권 쪽에 불리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역대 선거에서 보수층의 지지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의 판도는 진보 혹은 중도층에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야권으로서는 단일화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특단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두 후보가 이날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회동한 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지지층 분열을 막고 중도 층까지 끌어안기 위해 ‘감동’ 포인트를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해줄지 주목된다. (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위 기사에서 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11월 6일 단일화를 후보 등록 이전에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절차와 과제 등을 분석하면서 인용한 대선 관련 여론조사 두 건의 출처를 『한 언론이 지난 2~3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와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이 3~4일 실시한 여론조사』라고 각각 기술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한겨레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플러스, 인터넷 신문 뷰엔폴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각각 실시한 것으로 이들 매체에도 각각 보도된 바 있다.

이처럼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 보도한 것은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제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신문에 대한 신뢰

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06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일보 발행인 이 상 석**

〈주문〉

한국일보 2013년 1월 3일자 6면 「장하준 “朴, 줄푸세 때보다 엄청 좌경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박 당선인이) 과거 줄푸세, 소위 신자유주의 노선을 내세웠을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좌경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파든, 좌파든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에 맞춰야 하고, 이게 민주주의의 좋은 점”이라며 “어떤 분야에서는 민주통합당보다 (새누리당이)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교수는 “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장도 안 되는 단계에 왔다”면서 “복지가 미비하니 국민이 불안해 하고 여러 안 좋은 현상이 나오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를 늘려야 경제 성장이 잘 되는 그런 시기”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경제민주화 어젠다를 채택했는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박 당선인이 갖고 있던 시장주의적 사고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에 무조건 맡기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면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필요하면 시장 논리도 견제되고 제어될 수 있어야 경제민

주화가 이뤄진다”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이어 “국제 경제 환경이 안 좋다는 핑계로 복지 공약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지적한 뒤 “그것보다는 자본시장 통제 강화나 부품소재 산업 개발을 통해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는 게 장기적으로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신문발행일자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프로그램이 장하준 교수를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는 『장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 (후략)』라고만 기술했을뿐 정확하게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른 언론 매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 게재하면서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다.

이러한 보도행태는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07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윤 두 영

〈주문〉

경북도민일보 2013년 1월 7일자 1면 「잠적 보름 만에 입 연 김무성 “포항 보선 전략공천 하지 않겠나”」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1.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포항이든 영도든 그런 건 다 당에서 전략공천 하지 안겠나”.

대선을 승리로 이끈 이튿날 “제 역할이 끝났다”며 감사 메모 하나를 당사에 붙여놓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김무성 대선 총괄선대본부장이 잠적 13일 만인 최근 꺼져있던 휴대폰에 연락이 닿았다.

포항 남·울릉, 부산 영도 보궐 선거 출마설에 대해 물었다.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이랬다 저랬다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당에서 전략공천 하지 안겠나”고 반문했다.

그리고 “포항이든 영도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낭설이다”고 잘라 말했다.

김 총괄선대본부장의 말을 풀자면 이렇다.

두 지역 모두 현역인 새누리당 이재균(영도) 무소속 김형태(포항 남·울릉) 의원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이 진행중이고 최종 판결이 언제 날 지도 모르는데 벌써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성급하다. 다만 판결이 난 후 당에서 자신을 전략적으로 공천해준다면 어느 지역이든 나설 뜻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1월 말까지는 일체의 정치와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 “박근혜 정부의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달 중 영도 이재균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그 결과와 함께 2심이 진행중인 포항 김형태 의원의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서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지역을 타진하겠다는 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잠시라도 현장을 벗어나면 잊혀지는 정치권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4선 출신 김 전 총괄본부장이 어떤 식으로든 4월 보선에 출마해 금배지를 단 뒤 당 대표나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직을 꾀하고 훗날을 도모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손○○ 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부산일보가 1월 4일자 5면에 게재한 「잠적 13일

만에 입 연 김무성/”영도 포항 보선 당에서 전략 공천할 것”」 제목의 기사를 리드 부분만 살짝 고친 뒤 대부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취재기자가 김무성 새누리당 전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과 휴대전화 인터뷰를 통해 작성한 기사다. 부산일보 기자는 기사에서 김 전 총괄본부장이 선거 후 잠적한 지 13일 만인 3일 오후 휴대폰으로 연락이 닿아 부산 영도, 경북 포항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 물었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일보의 단독기사인 것이다.

그런데도 경북도민일보는 이 기사를 옮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사 기자가 취재해 작성한 것처럼 자사 기자의 이름을 명기하였다.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09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3.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4.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5. 한국일보 발행인 이 상 석
6.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7. 세계일보 발행인 김 병 수
8.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9.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국민일보 2013년 1월 7일자 14면 「아사드 “반군, 서방 꼭두각시”」 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 1월 7일자 8면 「바젤위, 은행 자산 보강의무 완화」 제목의 기사, 한겨레 1월 8일자 15면 「중 검열항의 ‘남방주말’ 기자들 파업」 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1월 9일자 A12면 「차베스 취임식 무기연기 …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 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1월 10일자 15면 「남미 좌파 정상들 ‘차베스 구하기」」 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1월 11일자 A8면 「美증시 ‘공포지수’/6년만에 최저」 제목의 기사, 세계일보 1월 14일자 1면 「佛, 阿 말리 내전 군사개입」 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1월 16자 A12면 「명품보석 해리윈스턴, 스와치 품에」 제목의 기사, 경향신문 1월 17일자 9면 「꿈의 여객기’ 보잉 787 또 기체 이상」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상기 9개 신문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국민일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6일 반군 세력을 서방 세계의 꼭두각시라며 이들이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라고 맹비난했다.

아사드 대통령은 이날 수도 다마스쿠스의 예술문화회관에서 가진 TV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시리아를 분할하고 약화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면서 “반군은 국민들의 먹을 것을 빼앗고 아이들에게서는 학교를 빼앗은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22개월째 내전으로 최소 6만여명에 달하는 희생자가 발생한 것을 의식한 듯 “반군이 공격을 멈추기만 한다면 새로운 정부와 헌법을 만드는 국가 화해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사드 대통령이 대중연설을 하기는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그는 지난해 11월 러시아TV와 인터뷰를 한 뒤 두 달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시리아는 전쟁상태로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 국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예상한 차기 대통령 선거 불출마와 같은 깜짝 제안은 내놓지 않았다. 당초 친아사드 정권 성향의 레바논 일간 ‘알 아크바르’는 아사드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차기 대통령 불출마를 포함한 5개항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알 아크바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사드 대통령이 정전(停戰) 국제감시단의 감시 허용, 제헌의회의 새 헌법 초안 제정, 거국 정부 수립, 자유선거 실시 등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마수드 칸 유엔 안보리 순번 의장이 최근 브라히미 특사가 미국, 러시아와 3자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혀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칸 의장은 “중요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또 중요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해 본다”고 말해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헤럴드경제)= 『바젤위원회가 은행권에 대한 자산 규제 도입 시기를 늦추고 규제 수위도 완화했다.

미국, 영국, 한국 등 27개국 중앙은행장과 금융 감독당국 책임자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IS)에서 회동 후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도입 시한을 당초 2015년에서 2019년으로 4년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LCR은 금융위기 시 30일 내 처분할 수 있는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을 말한다. 바젤위원회는 당초 2015년부터 LCR을 현금과 국채 및 우량 회사채로만 100% 채우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은행권 반발을 고려해 2015년까지 60%를 갖추고 이후 4년 동안 해마다 그 비율을 10%포인트씩 높이는 쪽으로 양보했다.

LCR은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바젤Ⅲ 개혁 패키지의 하나다. 이는 시장 위기가 다시 닥칠 때 은행이 당국 지원 없이도 30일 동안 견딜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이 검토돼 왔다.

이에 대해 은행은 이 제도로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며 은행 시스템이 국가 부채로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그러면서 LCR 도입을 늦추고 적용 대상에 현금 및 신용 등급이 높은 회사채와 국채 외에 주식과 우량 담보대출채권(RMBS) 및 금 같은 다른 유동자산도 포함하라고 요구해 왔다.

은행권은 바젤위 합의를 환영했다. 영국은행협회(BBA) 간부는 “RMBS를 LCR 대상에 포함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모기지 채권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중국 당국에 편집권을 침해당한 <남방주말> 기자들이 6일 파업을 선언했다. 주요 언론이 당국의 검열에 맞서 공개 파업을 선언한 것은 20여 년 만에 처음이다.

개혁성향 주간지 <남방주말> 기자들은 성명을 내어 “사태의 전말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편집과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6일 밤 경영진이 인터넷에 “이번 일(신년사설 수정)은 내부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며 당국의 개입을 부인하는 취지의 사과글을 올리자 이에 반발해 파업을 선언했다. 기자들은 “경영진의 성명은 광둥성 선전부의 지시에 따라 나온 것으로 편집국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국이 웨이보의 <남방주말> 계정도 탈취했다고 전했다.

앞서 <남방주말>은 ‘중국의 꿈은 입헌통치의 꿈’이란 제목의 신년사설을 실을 예정이었지만, 당국이 ‘우리는 어느 때보다 중국의 꿈에 가까이 있다’는 제목으로 바꾸고 내용도 친정부적으로 무단수정했다고 반발했다.

지식인을 포함한 시민들의 지지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 홍콩, 대만의 학자 27명은 후춘화 광둥성 서기에게 보낸 서한에서 검열 책임자인 튀전 선전부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광둥성은 중국 개혁개방의 선봉이었고, <남방주말>은 외부에 중국 개혁개방의 얼굴로 여겨지고 있다. 만일 튀전이 사퇴하지 않으면 이런 광둥의 전통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인터넷에 “언론자유를 지키자”, “튀전은 물러나라” 등의 손팻말을 든 사진을 올리며 <남방주말>을 응원했다.』

(서울경제)= 『베네수엘라 정부가 10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우고 차베스(사진) 대통령의 취임식을 무기한 연기할 뜻을 시사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베네수엘라 야당의 홀리오 보르헤스 의원은 6일 “헌법에서 정한 날짜에 취임식이 열리지 않을 경우 여러 국제기구들과 함께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내부 문제로 헌법을 왜곡하려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해외 단체와 대사관·국가 등과 연대해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에서 야권 후보로 나섰다가 차베스에게 패한 엔리케 카프릴레스 주지사도 “분명한 점은 정부를 다스릴 수장이 없고 국정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것”이라며 “차베스가 취임선서를 못할 경우 헌법에 규정된 가이드라인이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권은 실제 취임식이 열리지 않을 경우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의 불명확한 태도에 반발해온 야권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반발은 정부가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 취임식 날짜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일 베네수엘라 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는 “대통령 취임선서는 형식적인 것으로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여당은 차베스 지지자들에게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을 호소해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디오스다도 카베요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7일 “차베스 지지자들은 10일에 거리행진을 해달라”며 “국정공백은 있을 수 없고 차베스가 물러나기를 원하는 야권에도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1일 쿠바에서 암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 헌법 231항에는 대선 이듬해 1월10일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식에서 선서를 해야 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현재 앞에서 선서하면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233항에는 대통령 취임 전 명백한 공백이 있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여당과 야당은 유리한 조항을 끌어들이며 대립하고 있다.』

(한국일보)= 『베네수엘라 정부가 쿠바에서 암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에 참석할 수 없다고 8일(현지시간) 공식 발

표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수술 후 회복 기한을 취임식 이후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의회에서 취임선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나중에 대법원에서 취임선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예정일이나 차베스의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차베스가 사실상 유고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은 위헌적 조치라며 반발했다. 설사 대법원에서 취임선서를 하더라도 헌법에 국회 선서일로 명시된 10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 지도자 엔리케 카프릴레스는 “분명한 사실은 헌법상 차베스의 현재 임기가 10일 종료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마르 바르보자 의원은 “차베스가 회복될 동안 90일 간의 임시 유고 기간을 정하고 디오스다도 카베요 국회의장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야권이 차베스가 후계자로 지목한 마두로를 비난하고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카베요를 편들며 여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은 9일 취임식 연기가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긴급 회동을 가졌다. 베네수엘라 국영 TV는 “회담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지만 대법원 요직을 차베스 측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남미 좌파 정상들은 차베스 지지 행보에 나섰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과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은 10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리는 차베스 지지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이날 쿠바의 수도 아마나를 방문해 차베스를 문병하겠다고 밝혔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중남미 반미 블록을 추구해온 차베스 정부와의 긴밀한 외교·경제적 관계를 차베스 유고 시에도 계속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차베스는 2011년 6월 쿠바 방문 도중 골반 부위에서 종양이 발견돼 처음 수술을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네번째 암 수술을 받은 뒤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춰 위중설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경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시장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가 13.2로 2007년 6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VIX는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 대한 투자위험을 줄이는 옵션 가격을 기초로 산출된다.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낸다.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로 ‘공포지수’라고도 불린다.

다른 시장도 비슷한 분위기다. 유럽 증시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V스톡스(stoxx)지수와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CVIX 역시 2007년 중반 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자산운용사 스투드니들의 윌리엄 데이비스 글로벌주식팀장은 “유로존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 경기도 반등하고 있고 미국도 재정절벽(fiscal cliff)을 당분간 피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내전이 격화하는 서아프리카 말리에 프랑스가 병력을 전격 투입해 13일(현지시간) 급진 이슬람주의 세력인 반군과 사흘째 전투를 벌였다.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아프리카 다국적군 3300명 지원병력 파병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말리 정부는 북부지역의 이슬람주의 반군이 중부지역 코나까지 진격하자 지난 11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프랑스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프랑스는 미라주 전투기와 군인 400명을 투입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은 “이번 결정은 말리에 사는 프랑스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사개입은 진행 중이며 필요하다면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공중지원을 받은 말리군은 하루 만에 코나를 탈환했다. 말리 당국은 이틀간 교전으로 정부군 11명과 반군 수백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말리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자 9월 이후 말리에 병력을 배치하려고 했던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국가들은 시기를 앞당겨 이르면 13일 첫 파병을 하기로 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말리에 다국적군 3300여명을 배치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영국 총리실도 12일 성명에서 “말리에 외국 병력과 장비가 신속히 전달되도록 병참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일경제)= 『세계적인 시계업체 스와치그룹이 명품 보석 브랜드 해리윈스턴을 10억달러(약 1조600억원)에 인수한다.

스와치그룹은 지난 14일 해리윈스턴에 현금 7억5000만달러를 내고 부채 2억5000만달러를 이어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스와치그룹과 매각 협상을 해오던 해리윈스턴은 이번 합병으로 ‘도미니언 다이아몬드’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된다.

해리윈스턴은 1924년 우크라이나 이민자 가정 출신 미국인 해리 윈스턴이 만든 고급 보석회사다.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 고(故) 마릴린 먼로가 한 영화에 출연해 ‘다이아몬드는 여자들에게 최고의 친구’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해리윈스턴을 언급해 대중에게도 유명해졌다.

나일라 하이에크 스와치그룹 회장은 “이번 인수로 스와치가 한층 더 고급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는 다이아몬드 가공 부문에서도 기술 협력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리윈스턴의 다이아몬드 채굴사업 부문은 이번 인수 대상에서 빠졌다.

시장 평가도 우호적이다. 케플러캐피털마켓의 존 콕스 분석가는 “스와치는 오랫동안 보석 부문을 강화하려 했다”며 “전략적인 면에서 이번 합병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스와치는 지난 20년간 블랑팡, 브레게 등 명품 시계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고급화 전략을 펼쳐왔으나 보석 부문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향신문)= 『‘꿈의 여객기’라는 이름과 달리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보잉 787 여객기가 16일 일본에서 비행 도중 기체 이상으로 긴급 착륙했다.

이날 사고 직후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JAL)은 보유하고 있는 보잉

787 여객기에 대해 긴급 점검 결정을 내리고 잠정 운항 중단 조치를 취했다.

전일본공수는 16일 오전 8시10분쯤 야마구치현 우베 공항을 떠나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던 국내선 보잉 787기가 기체 이상으로 가가와현 다카마쓰 공항에 긴급 착륙했다고 밝혔다. 전일본공수에 따르면 이륙 후 15분 지나 사고 여객기의 조종실에 배터리 이상을 알리는 신호가 켜졌고, 조종실과 객실에 이상한 냄새가 감지됐다. 기체 내부에 연기가 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항공사는 덧붙였다.

사고 여객기의 승객 137명은 비상 탈출용 장치로 긴급 탈출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5명 정도 부상자가 있다”고 밝혔다.

오타 아키히로 국토교통상은 “이번 사고는 자칫 중대 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확실하게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전일본공수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잉 787기 17대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항공도 보유 보잉 787기 7대의 잠정 운항 중단을 발표했다. 이로써 전 세계 8개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잉 787기 50대 가운데 24대의 운항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보잉 787기는 연료 누출, 배터리 폭발, 브레이크 제어 컴퓨터 오류, 조종실 유리창 균열 등 각종 결함과 사고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일본에선 올 들어서만 지난 9·11·13일 잇달아 기체 결함이 발생했다.

미 연방항공청과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민간항공국은 조사에 착수했다. 레이 코너 미 보잉사 민간항공기 부문 최고경영자는 지난 11일 보잉 787기의 결함 및 사고와 관련해 외주 생산과 생산량 확대가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각 신문사의 해외 특파원이 취재해 송고한 것이 아니다. 기사마다 국내에 근무하는 기자 이름을 말미에 단 것으로 보아 각사 외신부(국제부) 기자들이 외국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번역해 정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적시 기사들은 하나같이 본문 중 어디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사의 경우 『대법원은 9일 취임식 연기가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긴급 회동을 가졌다. 베네수엘라 국영 TV는 “회담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라는 기술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TV가 그렇게 보도했다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아 직접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외국의 통신 신문 방송 등의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그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표절이다.

이같은 표절 행위는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 2012-109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3.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東亞日報 2012년 5월 8일자 A2면 「‘올란드 최측근’ 한국계 입양여성 장관 입각 유력」 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 5월 9일자 28면 「‘S.H.E’ 엘라 웨딩협찬 ‘역소리’ 나네」 기사의 사진, 경향신문 5월 10일자 26면 「아름답지만 두렵다/소글래스의 17번 홀」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신문들의 적시 사진은 외국 언론매체가 보도한 사진을 출처도 밝히지 않

고 전제했다. 이는 타 언론매체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57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문〉

서울경제 2012년 8월 27일자 A30면 「한국 남매, 일본 그린 동반 정벌」 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경제는 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경제 2012년 8월 27일자 A30면〉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상기 기사 관련 사진들은 각각 연합뉴스 보도 사진, KLPGT(한국여자프로

골프투어) 제공 사진인데도 서울경제는 이 사진들을 게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특히 연합뉴스 사진의 경우 원본사진의 일부를 잘라내고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타 언론사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10조 「편집지침」 ⑦(사진조작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8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2. 全羅日報 발행인 유 춘 택
3. 스포츠경향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스포츠동아 2012년 10월 12일자 1면 「오, 해냈어!/곰 벼랑탈출」, 10월 15일자 8면 「역시 판타스틱4 ... 모비스 2연승 질주」 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 全羅日報 10월 12일자 16면 「전북 방문의 해 지역 축제 연계 스타마케팅 효과 '톡톡」 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 스포츠경향 10월 15일자 19면 「'광해' 1000만 관객 끌어모으는 저력」 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동아, 全羅日報, 스포츠경향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진 1〉 스포츠동아 10월 12일자 1면



〈사진 2〉 스포츠동아 10월 15일자 8면



〈사진 3〉 全羅日報 10월 12일자 16면



〈사진 4〉 스포츠경향 10월 15일자 19면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는 10월 12일자 1면에 프로야구 두산측이 제공한 사진을, 15일자 8면에 KBL(한국농구연맹)이 제공한 사진을 각각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게재했다. 全羅日報는 10월 12일자 16면에 전주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가 제공한 사진을, 스포츠경향은 10월 15일자 19면에 CJ 엔터테인먼트 측이 제공한 사진을 각각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했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49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인일보 발행인 송 광 석
2.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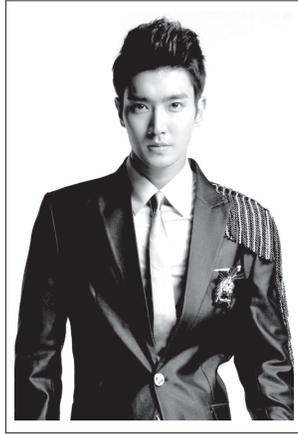
경인일보 2012년 11월 27일자 15면 「신세대 황제 베텔의 ‘광속 질주’」 제목의 기사의 사진, 경향신문 12월 10일자 22면 「톱스타의 이중성 능청스러운 연기/”누구나 망가지는 모습 보고 싶을 것”」 제목의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인일보,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진 1〉 경인일보 11월 27일 15면



〈사진 2〉 경향신문 12월 10일자 22면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인일보는 위 기사의 관련 사진으로 전남도가 news1을 통해 제공한 사진을, 경향신문은 위 기사의 관련 사진으로 SM 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한 배우 최시원의 반신 전면 사진을 각각 게재하면서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23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남신문 발행인 정 총 건

〈주문〉

경남신문 2013년 1월 9일자 20면 「돌아온다, LG 박래훈/살아날까, 도깨비팀」 제목의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남신문은 위 적시 기사의 관련 사진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진〉 경남신문 1월 9일자 20면

2. 위 사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신문은 프로농구 창원 LG세이커스가 제공한 박래훈 선수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또 이 사진은 지난 해 12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경기 사진으로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인데도 기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신문의 품위를 해치는 것으로 이러한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10조 「편집지침」 ⑥(관계사진 게재)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24 신문윤리강령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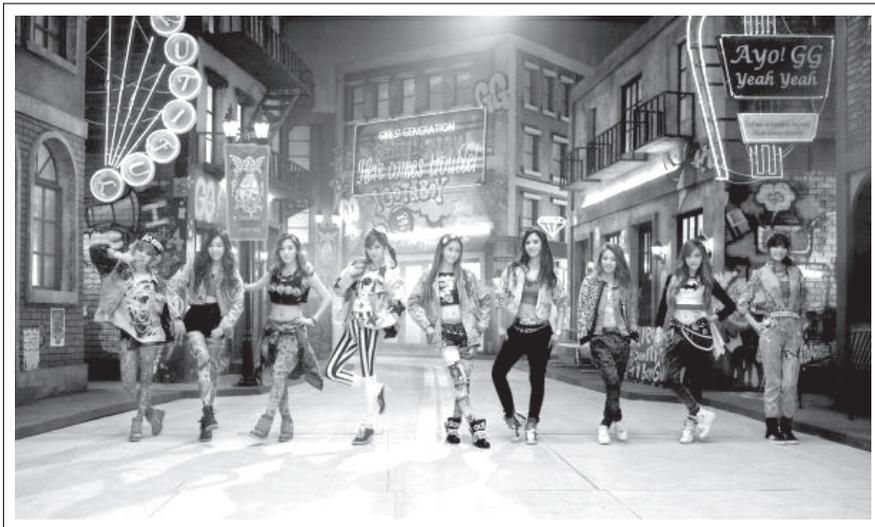
1. 경기일보 발행인 임 창 열
2.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윤 두 영

〈주문〉

경기일보 2013년 1월 10일자 19면 「소녀시대 “노래가 어렵다구요? 금방 좋아질걸요”」 제목의 기사의 사진, 경북도민일보 1월 21일자 4면 「영덕서 ‘바다의 로또’ 멩크고래 혼획」 제목의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기일보,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의 관련 사진으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진 1〉 경기일보 1월 10일자 19면



〈사진 2〉 경북도민일보 1월 21일자 4면

2. 위 사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기일보는 SM 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한 소녀시대 사진을, 경북도민일보는 포항해경이 제공한 밍크고래 사진을 각각 게재하면서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④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을 위반한 다른 기사들은 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kpec.or.kr) 참조〉